

형사정책

문 1. 형사정책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정책은 범죄의 예방과 퇴치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정책학의 성격을 띠고 있다.
- ② 형사정책은 인접학문의 성과를 이용하는 학제적 또는 간학문적 성격을 갖는다.
- ③ 형사정책은 형법학과 달리 규범학적 성격이 내포되지 않은 학문이다.
- ④ 형사정책학과 형법학은 상호의존성을 가진다.
- ⑤ 리스트(F. von Liszt)는 형법과 형사정책의 관계를 “형법은 형사정책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고 표현하였다.

문 2.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호처분은 촉범소년과 우범소년만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촉범소년에 대해서는 일체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③ 12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 ④ 형사처분은 범죄소년만을 대상으로 한다.
- ⑤ 우범소년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예방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문 3. 부정기형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상대적 부정기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② 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 ③ 현행법상 성인범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 ④ 교도관의 권한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 ⑤ 범죄자의 개선보다는 응보에 중점을 둔 제도이다.

문 4. 범죄예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예방단계에서의 범죄예측은 주로 소년들의 잠재적인 비행을 예측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나, 오히려 소년들을 미래의 비행자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② 재판단계에서의 범죄예측은 양형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 ③ 가석방결정을 위해 범죄예측이 활용된다.
- ④ 임상적 예측방법은 각 개인에게 내재한 특성을 집중적으로 관찰할 수 있지만 평가자의 전문성 여부에 따라 동일한 대상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⑤ 통계적 예측방법은 범죄의 종합적인 측면과 개별 범죄자의 고유한 특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지만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문 5. 甲은 차량을 절도하면서 사회 일반적인 규범에는 어긋나지만 친구들과의 의리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하였다. 사이크스(G. M. Sykes)와 맛차(D. Matza)의 중화기술의 예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① 책임의 부정
- ② 가해의 부정
- ③ 피해자의 부정
- ④ 비난자에 대한 비난
- ⑤ 상위가치에 대한 호소

문 6. 화이트칼라 범죄(white collar crime)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덜랜드(E. H. Sutherland)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들이 이욕적 동기에서 자신의 직업활동과 관련하여 행하는 범죄라고 하였다.
- ②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범죄의식은 낮은 편이다.
- ③ 공무원의 뇌물수수, 회사원의 금융사기나 횡령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④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적발이 용이하지 않다.
- ⑤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피해의식이 높다.

문 7. 뒤르켐(E. Durkheim)의 견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자살은 인간의 왜곡된 이성이 낳은 결과라고 하였다.
- ② 모든 사회와 시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범죄란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 사회에서 형벌의 집행대상으로 정의된 행위가 범죄라고 보았다.
- ③ 범죄가 사회유지를 위해 중요한 기능은 하지만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하였다.
- ④ 범죄의 본질을 개인감정의 침해로 보고 있다.
- ⑤ 자살은 호경기 때보다 불경기 때 가장 높다고 하였다.

문 8. 보호관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일반준수사항 이외에 특별준수사항은 부과될 수 없다.
- ③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가퇴원된 때부터 개시된다.
- ④ 보호관찰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보안처분설, 변형된 형집행설, 독립적 제재설 등의 논의가 있으며, 판례의 입장은 형법상의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
- ⑤ 대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실이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 그 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 문 9. 고전주의 범죄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효과적인 범죄예방대책은 형벌을 부과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②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특성을 고려한 형벌을 부과하여야 한다.
 - ③ 미국 범죄사회학이론 중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 ④ 베카리아(C. Beccaria)는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 ⑤ 고전주의 이론가들이 관심을 둔 사항은 형벌제도의 개혁이었다.

문 10. 형사정책에 관한 학자와 그 이론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ㄱ. 롬브로조(C. Lombroso)	a. 형법에 있어서의 목적사상 (개선, 위하, 무해화)
ㄴ. 페리(E. Ferri)	b. 범죄인류학, 생래적 범죄인
ㄷ. 제이콥스(P. P. Jacobs)	c. 쌍생아연구
ㄹ. 랑예(J. Lange)	d. 범죄사회학, 범죄포화법칙
ㅁ. 셸던(W. H. Sheldon)	e. 체형이론
ㅂ. 리스트(F. von Liszt)	f. 성염색체이론

- ① ㄱ - b
- ② ㄴ - d
- ③ ㄷ - e
- ④ ㄹ - c
- ⑤ ㅂ - a

- 문 11. 하위문화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위문화란 일반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문화와는 별도로 특정집단에서 강조되는 특수한 가치 또는 규범체계를 의미한다.
 - ② 밀러(W. Miller)는 하위계층 청소년들의 ‘관심의 초점’(focal concerns)이 중산층 문화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범죄에 빠져들기 쉽다고 보았다.
 - ③ 코헨(A. Cohen)은 하위계층 청소년들간에 형성된 하위문화가 중산층의 문화에 대해 대항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다.
 - ④ 밀러(W. Miller)나 코헨(A. Cohen)의 하위문화이론으로는 중산층 출신 청소년의 범죄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 ⑤ 코헨(A. Cohen)은 ‘비행적 하위문화’를 범죄적 하위문화, 갈등적 하위문화, 도피적 하위문화라는 3가지 기본형태로 분류하였다.

- 문 1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②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③ 상담소 등에서의 상담위탁
 - ④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⑤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문 13. 소년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보호처분의 일종으로 소년법이 규정하고 있다.
 - ② 선도의 필요가 인정되는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에 대해 부과한다.
 - ③ 검사의 기소재량과 소년사건에 대한 법원선의주의의 결합에 기초하고 있다.
 - ④ 대상 소년의 일정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 ⑤ 지역사회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발하여 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한다.

문 14. 소년법 제38조 내지 제40조에 규정된 보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보호처분의 결정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 ② 보호처분 변경의 결정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
- ③ 보호처분의 결정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
- ④ 보호처분의 계속 중 본인이 처분당시 20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경우
- ⑤ 보호처분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문 15. 다음은 사회학적 범죄이론 가운데 학습이론에 관한 설명들이다. 옳지 않은 내용들만으로 묶인 것은?

ㄱ. 준범행위와 마찬가지로 범죄행위도 주위로부터 학습된다는 이론이다.
ㄴ. 파르드(J. G. Tarde)는 모방의 법칙을 주장하면서, 그 내용 중 하나로 모방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강하게 일어난다는 삼입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ㄷ. 서덜랜드(E. H. Sutherland)는 차별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을 주장하면서, 그 내용 중 하나로 어떤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법률위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ㄹ. 글래저(D. 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differential identification theory)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준거집단도 학습의 대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차별적 접촉이론과 차이가 있다.
ㅁ. 버제스(R. Burgess)와 에이커스(R. Akers)의 사회적 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은 사회적 상호작용만을 중시하고 개인의 욕구와 같은 비사회적 사정들을 배제시킨 이론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ㄴ, ㄷ
- ④ ㄴ, ㅁ
- ⑤ ㄷ, ㄹ, ㅁ

문 16. 소년사범에 대해 인정되고 있는 형사사건의 특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병합하여야 한다.
- ② 일반형사사건은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되어 있으나,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사형, 무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필요적 변호사건이 확대되어 있다.
- ③ 범행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④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환형처분을 선고하지 못한다.
- ⑤ 소년이 단기 2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때에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문 17. 보호관찰명령에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대상자(○)와 아닌 자(×)를 옳게 표시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선고유예자
 ㄴ. 집행유예자
 ㄷ. 소년법 제32조의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중 16세 이상인 자
 ㄹ. 가석방자
 ㅁ. 소년원 가퇴원자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8. 범죄피해자 또는 피해자학과 관련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피해자구조법의 보상대상에는 강요된 행위, 긴급피난, 과실에 의한 행위의 피해자도 포함된다.
- ② 마약복용, 매춘 등의 행위는 이른바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에 속한다.
- ③ 현행법상 피해자는 고소권자로서의 권리를 갖거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거나,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받거나, 배상명령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 ④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부녀에 대한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 ⑤ 멘델존(B. Mendelsohn), 헨티히(H. von Hentig) 등은 피해자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문 19. 비범죄화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비범죄화이론은 입법자에 의한 법률규정 자체의 폐지만을 말한다.
- ② 피해자 없는 범죄와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에서 특히 문제된다.
- ③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불기소처분은 비범죄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 ④ 비범죄화이론은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한다.
- ⑤ 경미범죄의 비범죄화는 오히려 형법의 보충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문 20. 소년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년원장은 일정한 경우에 보호소년 등의 서신수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서신의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 ② 소년원의 임무는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로부터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하는 것이다.
- ③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에 달한 때에도 교정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원시키지 않을 수 있다.
- ④ 보호소년에게는 성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점차로 향상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 ⑤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소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산업체로 통근취업을 하게 할 수 있다.

문 21. 재산형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은 벌금형에 대해서도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인정하고 있다.
- ② 일수벌금제도는 범죄자의 경제상태를 실제로 조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 ③ 범죄에 제공된 공범자의 소유물은 몰수할 수 있다.
- ④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 ⑤ 추징은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몰수에 대신해서 그 가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사법처분이다.

문 22. 자유형과 그 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유형의 집행은 수형자의 신체를 구속함으로써 사회를 방위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 ②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형의 집행방법은 구금주의이다.
- ③ 교도작업은 신청에 의해서만 과해진다.
- ④ 구류의 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 ⑤ 자유형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무기형은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하다.

문 23. 범죄원인론 중 이른바 갈등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는 개인이 세운 목표와 수단간의 괴리가 있는 경우에 제도화된 수단을 거부하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목표를 이루려 할 때 발생한다.
- ② 법의 제정과 적용은 권력을 차지한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 ③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빈부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불평등하게 법이 집행된다.
- ④ 범죄통제는 지배계층의 피지배계층에 대한 억압수단이다.
- ⑤ “어떤 사람들은 범죄를 범하고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은 범죄를 범하지 않는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들은 범죄로 정의되는데 비해 그 외의 다른 행위들은 왜 범죄로 보지 않는가”를 물어야 한다.

문 24. 소년사건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소년사건은 소년의 보호와 지도라는 이념으로 인해 조사단계에서 소년의 진술거부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에 의해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결정으로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③ 본인 또는 보호자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④ 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인·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이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인·보호자 또는 참고인에 대해 동행영장을 발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문 25. 양형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양형의 지역간 불균형이나 법관 개인간 편차 등 양형의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②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양형과정의 일부를 양형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이 있다.
- ③ 판결전조사제도를 활용하여 이를 양형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방안이 있다.
- ④ 양형지침서는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을 구속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 ⑤ 유·무죄 인부절차와 형량결정절차를 구분하는 소송절차 이분론의 방안이 있다.

국 제 법

문 1. UN헌장 제2조에 규정된 기본행동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권평등의 원칙
- ② 민족자결의 원칙
- ③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원칙
- ④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 ⑤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문 2. 국가의 국제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기관의 행정적 행위만이 국제책임을 야기한다.
- ② 외국인이 제기한 소송의 수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은 소위 ‘재판의 거부’에 해당한다.
- ③ 피해의 발생이 사인(私人)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도 국가가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국제책임을 발생할 수 있다.
- ④ 국제의무의 위반은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다.
- ⑤ 국제책임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 금전배상, 사죄 등이 있다.

문 3. 1969년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하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조약체결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에 관하여 변경이 발생하였을 것
- ② 사정의 변경이 조약체결 당시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경우일 것
- ③ 사정이 근본적으로 변경된 경우일 것
- ④ 당해 사정의 존재가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당사자 동의의 본질적 기초였을 것
- ⑤ 사정변경의 효과가 그 조약에 따라 계속 이행되어야 할 의무의 범위를 급격하게 변환시킬 것

문 4. 세계무역기구(WTO)의 가입을 결정하는 기관과 가입승인을 위한 의사결정정족수로 옳은 것은?

- ① 일반이사회, WTO회원국의 3분의 2
- ② 일반이사회, WTO회원국의 2분의 1
- ③ 각료회의, WTO회원국의 3분의 2
- ④ 각료회의, WTO회원국의 2분의 1
- ⑤ 일반이사회, WTO회원국의 4분의 3

문 5. 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WTO의 기능 중 하나는 WTO설립협정 및 다자간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의 촉진이다.
- ② WTO 창설 이후 최초로 출범한 대규모 ‘다자간무역협상’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은 도하개발아젠다(DDA)이다.
- ③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 비회기 중에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④ 유럽공동체(EC)가 투표권을 행사할 때는 WTO회원국인 EC 회원국 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가진다.
- ⑤ WTO로부터의 탈퇴는 회원국의 서면 탈퇴통보가 WTO사무 총장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12월이 경과한 날 발효한다.

문 6. 다음 보기 중 당사자에 의한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국가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 ㄱ. 상주외교사절의 접수와 파견
- ㄴ.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체결
- ㄷ. 다자간 국제회의에 동시 참석
- ㄹ. 통상대표부의 설치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문 7. 외교적 보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피해자인 자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할 수 있다.
- ② 국가의 외교적 보호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 ③ 국가는 피해자인 자국민이 재류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국내적 구제절차를 완료한 후에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원칙적으로 피청구국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외국인의 본국에 대하여 국제책임 해제의 의무를 진다.
- ⑤ 국적계속의 원칙이 요구되는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가 보다 강한 외교적 보호를 구하기 위하여 국적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문 8.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직선기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영국과 아이슬랜드간의 어업관할사건 (Fisheries Jurisdiction Case)을 통하여 직선기선 설정의 합법성을 인정하였다.
- ② 직선기선의 내측 수역을 영해라고 한다.
- ③ 간출지(low-tide elevations)로부터도 언제나 직선기선이 설정될 수 있다.
- ④ 다른 국가의 영해를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공해로부터 차단시키더라도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
- ⑤ 직선기선의 설정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이탈할 수 없다.

문 9. UN헌장에 규정된 표결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중요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4분의 3의 다수로 한다.
- ②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하는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과반수로 한다.
- ③ 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의 과반수로 한다.
- ④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UN헌장 제6장에 의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있어서는 분쟁의 당사국인 이사국은 투표를 기권한다.
- ⑤ UN헌장은 UN에 대한 재정분담금의 지불을 만 1년간 연체한 회원국이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10.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패널은 평결(rulings)과 권고(recommendations)에서 대상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감할 수 있다.
- ② 개별 패널위원이 패널보고서에서 표명한 의견은 익명으로 한다.
- ③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패널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5인으로 패널을 구성하는 데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3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 ④ 선진회원국과 개발도상회원국간의 분쟁시 개발도상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패널위원 중 적어도 1인은 개발도상회원국의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⑤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 문 11. 1969년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상 조약의 유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또한 그 철회를 위해서는 동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 ② 어떠한 조약도 유보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계약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③ 조약의 적용을 받는 국가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 ④ 조약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단점이 있다.
 - ⑤ 국가는 원칙적으로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에 유보를 형성할 수 있다.

- 문 12. 국제사법재판소(ICJ)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양 기관 모두 분쟁을 부탁하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들간의 별도의 합의가 요구된다.
 - ② 양 기관 모두 각 기관이 내린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가 상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③ ICJ 판결 및 WTO 패널보고서는 모두 선례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양 기관 모두 각각의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당해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두고 있다.
 - ⑤ 양 기관 모두 관정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두고 있지 않다.

- 문 13.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밖에 인접한 수역으로서,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 ②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는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 국제법상 처음으로 성문화되었다.
 - ③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원칙적으로 연안국의 동의없이 수행될 수 없다.
 -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해저전선·관선부설의 자유를 가진다.
 - ⑤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은 중간선 원칙에 의한다.

- 문 14. 다음 보기 중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규칙및절차에관한양해각서(DSU)가 적용되는 대상협정(covered agreements)을 모두 묶은 것으로 옳은 것은?

ㄱ. 1994년 GATT	ㄴ. 농업협정
ㄷ. 분쟁해결규칙및절차에관한양해각서(DSU)	ㄹ. WTO설립협정
ㅁ. 복수국간 무역협정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ㄱ, ㄴ, ㄹ, ㅁ
- ④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 문 15. 한국의 범죄인인도법상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②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진 경우
 - ③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의 환경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함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④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 ⑤ 인도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계속(係屬) 중이거나 확정재판이 있는 경우

- 문 16. 자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UN헌장에 의하면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armed attack)이 발생한 경우 자위권이 인정된다.
 - ② UN헌장은 자위권을 국가의 ‘고유한 권리’(inherent right)로 인정하고 있다.
 - ③ UN헌장은 개별적 자위권 외에 집단적 자위권도 인정하고 있다.
 - ④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자위권 행사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 ⑤ 자위권의 행사에는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 문 17. 다음 보기 중 조약체결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주체를 모두 묶은 것으로 옳은 것은?

ㄱ. 독립국가	ㄴ. 국제연합(UN)
ㄷ. 영세중립국	ㄹ. 교전단체

- ① ㄱ,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문 18.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섬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섬은 바닷물(water)로 둘러싸여 있으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서 만조시에 수면 위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한다.
- ② 모든 섬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영해를 가진다.
- ③ 사주(砂洲) 등 반도 모양으로 돌출된 지형으로 간조시에 본토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섬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 ④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s)도 대륙붕을 가진다.
- ⑤ 연안국의 영해 밖에 존재하는 인공섬이나 그 외의 해양구조물은 독자적인 영해를 가지지 못한다.

문 19.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결에 관한 모든 문제는 원칙적으로 출석 재판관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 ② 재판소에서의 심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재판소 및 재심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판결 당시에 과실없이 알지 못했던 결정적 요소가 발견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 ④ 재판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패소국이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 ⑤ 재판소의 재판관은 임기종료 후에도 후임자가 충원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문 20. 다음 보기 중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된 제도를 묶은 것으로 옳은 것은?

ㄱ. 최대 12해리 영해제도	ㄴ. 심해저제도	ㄷ. 대륙붕제도
ㄹ. 군도수역제도	ㅁ. 무해통항제도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ㅁ
- ⑤ ㄴ, ㄹ, ㅁ

문 21. A국 국적의 甲이 B국에서 C국 국적의 乙에 의해 살해된 경우에 A국이 乙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는?

- ① 주관적 속지주의(su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
- ② 객관적 속지주의(o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
- ③ 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
- ④ 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nationality principle)
- ⑤ 효과주의(effects doctrine)

문 22.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기구(DSB)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DSB는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 ② DSB는 패널설치 요청이 의제에 상정된 첫 번째 회의에서 패널설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③ DSB는 국내법규와 관행의 투명성을 더욱 강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 ④ DSB는 분쟁당사국들에게 패널위원 후보를 제안한다.
- ⑤ DSB는 회원국의 분쟁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제공할 수 있다.

문 23. 1969년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상 조약체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속적 동의란 국가가 조약문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 ②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서명, 조약문서의 교환, 비준, 수락, 승인, 가입 또는 기타 합의된 방법으로 표시된다.
- ③ 조약이 발효하기 위해서는 UN사무국에 등록되어야 한다.
- ④ 서명에 의하여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는 조약의 경우, 교섭국의 대표에 의한 조약의 조건부서명은 그 대표의 본국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조약의 완전한 서명을 구성한다.
- ⑤ 이미 성립된 조약에 원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참가하여 당사자가 되는 행위는 가입에 해당한다.

문 24. UN의 공식적인 전문기구가 아닌 것으로 묶인 것은?

- ① 세계무역기구(WTO) -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 ② 세계무역기구(WTO) - 국제원자력기구(IAEA)
- ③ 국제해사기구(IMO)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④ 국제원자력기구(IAEA)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 ⑤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 국제통화기금(IMF)

문 25. () 안에 해당하는 1994년 GATT상의 원칙은?

○ 내국세 부과 및 국내법규 적용에 있어 국내동종제품보다 수입제품을 불리하지 않게 대우해야 하는 것은 (A)원칙에 해당한다.
○ 지역무역협정은 (B)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A	B
① 최혜국대우	최혜국대우
② 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
③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④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⑤ 수량제한의 금지	내국민대우

노동법

문 1.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균등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균등대우원칙에 반하는 차별대우는 사법적으로 무효로 될 뿐 형사처벌되지는 않는다.
- ③ 가사사용인에게는 균등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실적에 따른 임금의 차등지급은 균등대우원칙에 반한다.
- ⑤ 국적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균등대우원칙에 반한다.

문 2.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자는?

- ①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 ②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 ③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 ④ 가사사용인
- ⑤ 18세 미만의 근로자

문 3.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② 취업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③ 사업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④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전이라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문 4. 근로기준법 조항 가운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공민권 행사보장(제9조)
- ② 근로조건명시(제24조)
- ③ 위약금예정금지(제27조)
- ④ 강제저축금지(제29조)
- ⑤ 휴업수당지급(제45조)

문 5.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다음 글의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금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A)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B)을(를) 초과하지 못한다.

<u>A</u>	<u>B</u>
① 평균임금	10분의 1
② 평균임금	10분의 2
③ 통상임금	10분의 1
④ 통상임금	10분의 2
⑤ 평균임금	10분의 3

문 6.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해고예고수당 ② 야간근로수당
③ 연장근로수당 ④ 장해보상금
⑤ 휴일근로수당

문 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결격요건)이 아닌 것은?

- ① 사용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②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 ③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을 부수적으로 하는 경우
- ④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문 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 ②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한 경우
-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 ④ 근로자의 경제상의 불행을 방지, 구제하기 위한 기금을 기부한 경우
- 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거를 행정관청에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 문 9.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사용자는 해고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야 한다.

- 문 10.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가 비준, 공포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Convention)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② 국제노동기구의 권고(Recommendation)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 ③ 국제연합이 채택한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은 경찰공무원의 단결권에 대하여 국내법에 의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 ④ 국제연합이 채택한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⑤ 우리나라는 ‘단결권및단체교섭권에대한원칙적응에관한협약’(ILO 제98호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 문 1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다음 글의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A)에(게)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A)이(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B)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A	B
① 법원	중재재정
② 노동부장관	중재재정
③ 법원	확정판결
④ 노동위원회	중재재정
⑤ 노동위원회	확정판결

- 문 12.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같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① 건설업
 - ② 운수업
 - ③ 통신업
 - ④ 접객업
 - ⑤ 영화제작업

- 문 13.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 ② 사업주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 ③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그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④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 ⑤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문 14. 단체행동권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헌법은 단체행동권의 주체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단체행동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② 사용자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제3자가 간접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헌법재판소는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법규정을 위헌이라고 하였다.
 - ⑤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행위는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더라도 위력의 요소가 없어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문 1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대의원회를 두지 않은 노동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 ③ 임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임원의 성명과 주소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제출하여야 할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문 1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 ②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게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 ③ 노동조합은 법인격 유무에 관계없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
- ④ 회원조합원들을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이 있는 사업자조합은 당해 사업자조합의 정관에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⑤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문 17. 다음 설명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위법한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일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 ㄴ. 노동조합의 간부가 조합원들에게 쟁의행위에 참가하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는 경우
- ㄷ.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주는 경우
- ㄹ.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 18. 노동관계의 당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각각 근로자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②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관계의 존재유무를 중시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③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④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중인 자는 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⑤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이다.

문 19. 노동위원회법상 중앙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 ③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노동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문 2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단체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단체협약은 일종의 계약이므로 구두(口頭)로 체결할 수 있다.
- ④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하더라도 유효하다.

문 21. 다음 사업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내버스 운송사업
- ② 석유공급사업
- ③ 병원사업
- ④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 ⑤ 통신사업

문 22.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노사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분기별 생산계획
- ② 노동쟁의의 예방
- ③ 신기계의 도입
- ④ 작업수칙의 제정
- ⑤ 근로자의 고충처리

문 23. 노동법의 법원(法源)의 적용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내용은 무효이다.
- ② 적용범위가 같은 두 개의 단체협약이 시간적으로 전후하여 성립되면 후에 성립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③ 단체협약이 종전 단체협약보다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단체협약은 기존의 조합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선원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보다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 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4항에서 정하는 감봉(減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정하는 제재 관련 규정은 배제된다.

문 24.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 ① 실업급여
- ② 육아휴직급여
- ③ 산전후휴가급여
- ④ 장해급여
- ⑤ 직업능력개발사업

문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 ① 요양급여
- ② 건강검진
- ③ 휴업급여
- ④ 간병급여
- ⑤ 유족급여

경 제 법

문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의 표준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③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면서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문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규모가 1천억원 미만인 회사가 하는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이라도 그것이 효율성 증대효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 ③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규모가 2조원 미만인 회사가 임원겸임 방식으로 하는 기업결합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더라도 허용된다.
- ④ 새로운 회사의 설립에 특수관계인만이 참여하는 방식에 의한 기업결합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더라도 허용된다.
- ⑤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방문판매자등이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재화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해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방문판매원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하도록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③ 당해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결제업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④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여부나 본인의 진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신용정보업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⑤ 미성년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문 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방문판매자등의 계약체결전 정보제공의무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설명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를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방문판매원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설명하거나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 ③ 전화권유판매에 따른 계약서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당해 계약의 내용을 모사전송이나 전자문서로 송부할 수 있다.
- ④ 재화등의 가격 이외에도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소비자의 구매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⑤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문 5. 가수 지망생 乙은 甲엔터테인먼트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甲회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못이겨 “전속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의 10배와 총투자액의 10배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겠다”고 약정하였다. 甲회사의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정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 ① 불이익제공 ② 구입강제
- ③ 이익제공강요 ④ 판매목표강제
- ⑤ 경영간섭

문 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법위반행위의 피해자가 아니라도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자는 그 신고 내용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을 가진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문 7. 국내 가전제품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甲, 乙, 丙은 판매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2004년도 판매실적을 토대로 회사별 시장점유율을 확정하고, 향후 이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 ① 거래조건협정 ② 공급제한협정
- ③ 설비제한협정 ④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협정
- ⑤ 가격제한협정

문 8.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별약정은 구두는 물론 묵시적인 합의라도 상관없다.
- ② 계약체결에 있어 사업자가 약관내용과 다른 설명을 한 경우에는 그 설명내용 역시 개별약정이 될 수 있다.
- ③ 계약체결 후 계약의 변경 또는 보충으로 약관과 다른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한다.
- ④ 개별약정의 내용이 약관에 비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⑤ 개별약정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로 될 경우에는 개별약정으로 인하여 적용이 배제되었던 약관조항이 적용된다.

문 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입증의 곤란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 ② 추정조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다.
- ③ 대법원 판례는 그 성질에 대하여 법률상의 추정이 아니라 사실상의 추정으로 보고 있다.
- ④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당해 행위자는 그 일치된 행위가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수증할 수 있는 정황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다.
- ⑤ 추정조항이 적용되어 부당한 공동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 10. 다음 사례에 관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적용할 때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동대문 소재 대형상가건물 소유자인 甲은 영세의류상인 乙에게 점포 1개를 임대하였다. 甲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관이 포함되어 있다.

가. 임대료는 매년 10% 인상하기로 한다.

나. 甲은 임의로 점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乙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자신이 임차점포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라. 이 약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甲의 해석에 따르기로 한다.

ㄱ. 가.항은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ㄴ. 나.항은 甲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상당한 이유없이 乙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되므로 무효이다.

ㄷ. 다.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乙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다.

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라.항에 불구하고 乙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8.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규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지나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기 위하여 도입된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 ② 약관규제법 제8조의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규정에 대해 특별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 ③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할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법정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 ⑤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입은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문 19. 甲회사는 자산의 일부를 주권상장법인인 乙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였다. 甲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하는 행위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甲회사가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 ㄴ. 甲회사가 乙회사의 주식을 乙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0% 미만으로 보유하는 행위
- ㄷ. 甲회사가 乙회사 이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
- ㄹ. 甲회사가 국내 보험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 20. 소비자보호법상 사업자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 환경친화적인 기술 개발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 ㄴ.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의무
- ㄷ. 물품 또는 용역의 표시기준을 마련할 의무
- ㄹ. 소비자에게 제공한 위해물품을 자진수거할 의무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 2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신규사업 진출로 인하여 자금수요가 증대된 경우
- ②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③ 재해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 ④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⑤ 도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문 2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채무보증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지되는 채무보증에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된 채무 외에 사인으로부터의 대차로 인한 채무의 보증도 포함된다.
- ②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범위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는 동일하다.
- ③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비록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더라도 채무보증금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④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현황을 국내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채무보증 금지의 규정을 면탈하려는 탈법행위도 금지된다.

문 23. 소비자보호법상 사업자가 부담하는 결함정보보고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규모점포를 설치·운영하는 유통사업자는 결함정보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
- ② 물품을 제조·수입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결함정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 ③ 물품에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는 결함정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 ④ 관계법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결함도 보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결함에 해당한다.
- ⑤ 결함정보를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품의 결함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당해 결함보고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

문 24. 소비자보호법상의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甲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 甲은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나 곧바로 법원에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ㄴ. 甲은 소비자보호원의 합의권고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 ㄷ. 甲은 조정신청을 한 이상 조정결정에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 ㄹ.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상대방이 불복하여 조정이 실패한 경우 甲은 법원에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 25.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할부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수인의 철회권 행사기간을 5일로 정한 계약조항은 무효이다.
- ② 매수인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③ 할부계약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냉장고 및 세탁기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⑤ 매도인이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계약서 1통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한다.